

제8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학술행사

지방농정의 과제와 농업경영인 출신 지방의원의 역할

〈주제발표 1〉

지방농정의 현안과 문제점, 비람직한 발전방향

: 이 규 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일천한 역사와 중앙집권적 전통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8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농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① 중앙집권화된 정치체제의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고유영역과 종합영역이 구분되어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약해 중앙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이 너무 커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지역농정을 좌우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지방의회 의 구조나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집행부의 견제가 힘들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하게끔 되어

있다. 지자체 농정기능은 중앙농정의 집행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양평군이나 홍천군의 사례를 보면 재정 문제로 지방농정이 전혀 수행되지 못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은 정책결정 부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지방농정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 한농연 회원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어 현장농정이 전무한 데 있다. 지방으로 갈수록 면의 기능이 강해져야 하는데 반대로 되고 있다. 농촌지도사업은 직원들의 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장의 중앙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방농정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또한 늘려야 한다.

단기적으로 주체들의 의식 변화를 통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한 것도 많다. 제도적으로는, 우선 지방세제의 개편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중앙정



▲ 무더위 속에서도 토론회에 집중하고 있는 회원들.

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은 중앙정책 추진을 위한 일종의 당근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주제발표 2〉

지방농정 참여를 위한 한농연 출신 지방의원의 역할과 과제

: 김 원 기 한농연 지방의원협의회장

지자체들은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통제 속에서 움직여 왔다.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은 지역농업발전 주체가 정치적·행정적으로 확립되는 데에서 시작된다.

농업인 출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볼 때, 지방의회가 법적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민원해결사' 역할에 매몰되었다. 주민들의 자치의식 또한 기초공동체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전개하며, 지역내 농민단체들과 협력하고 참여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지방농정 정착을 위해 의결권, 조례제정권, 예산결산에 관한 권한, 감사권한, 의견제시권, 청원수리권 등의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농업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의 사업을 펴 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농업조직(농협)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농연 출신 276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조직적 역량을 발휘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선, 농업현안에 대해 지방의원이 공동결의를 하여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치적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정토론 1〉

군의원의 관점에서 본 지방농정

: 서 봉 석 산청군의회 의원

총체적인 중앙·지방농정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토론은 각급 연합회별로 크게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지방농정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혹은 다원적기능 : NTC)에 대해 중앙부처에 대해 적극 알리고 설득해야 하겠다. 지방농정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규천 연구위원의 주장에 공감한다. 이왕 시작한다면 지역의 생산자조직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겠다.

의원수 13인 이하 지방의회에서는 농림상임위원회의 설치가 안된다. 우리 산청군의회에서는 농림관광연구회와 환경도시연구회를 만들어서 활동 중이다. 이러한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에서는 선거시 농촌 주민들의 정치적이 에너지가 소지역 이기주의 등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기 쉽다. 중선거구제로 제도를 개선하고 최다 득표를 받아 당선되는 사람을 도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은 농업생산의 지역성, 재해·재난대비 등을 고려할 때 재고되어야 한다.

농업 부문 투자는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예산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매년 11월마다 따지고 간담회를 열자.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도 계속 지방자치제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끈질기게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

〈지정토론 2〉

지방농정의 발전방향

- 컨설팅 수행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

: 김 기 태 (주)지역농업네트워크 경남지사장

WTO 뉴라운드 등 외국의 압력과 소비자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농업 여건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농협의 농정 기능은 미약한 실정이다.

지역농정의 발전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가에서 농민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농민단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사안이 터질 때마다 데모 한 번으로 호지부지 끝나왔던 게 사실이다. 장기적인 이념을 개발하고 농정당국에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는 약 100개의 농정사업을 쥐고 있다. 사업 예산이 배분되어 일선 시군까지 내려갈 경우 재원은 산산조각나 버린다. 평창군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조합하여 시너지화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중앙정책들을 지역에서 적절히 조합하여 종합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농정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주체들의 위기의식 공유이다. 하지만, 여건이 그나마 나은 곳은 '아직 우리 지역은 괜찮아' 하면서 의식이 전무하다. 경남 지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은 농정과 기능의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했다. 이렇게 되면 기획·평가 기능 등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농정 기획기능부터 강화해야 한다. 읍면단위 주민자치센터는 반대한다. 차라리 지역 농업 실정에 밀착하는 농업기술센터 출장소를 늘리는 것이 낫다.

〈지정토론 3〉

: 성두현 서산시의회 의원 / 한농연 충청남도연합회 정책부회장

이번 토론회의 결과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규천 연구위원의 주장처럼 모두가 의무를 다하며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 서봉석 의원의 중선거구제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인구가 적은 읍면은 선거구를 합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본다. 농민의 의무를 다하고 의지를 지키며 열심히 관철시켜 나가려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한다.

〈지정토론 4〉

김 덕 영 경기도청 농업정책과장

지역농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조직과 인력의 문제라 본다. 능력이 있고 적재적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 인력이 적은 게 문제다.

토론자 생각으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행정직을 통합하는 게 낫다고 본다. 2·3중의 조직중복으로 매우 어렵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일할 사람'이 제대로 없으면 사업추진이 안된다.

〈청중토론 1〉 WTO에서 지자체 직불제가 가능한가?

김 용 빈 철원군연합회

(이규천 연구위원)

WTO는 지자체의 직불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자체까지 어떻게 WTO 인원들이 와서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지자체의 직불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농연 회원들과 지자체 장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마을' 등의 지원 사업 사례를 살펴보다도 농림부와 행자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여러 부처가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나서고 있어 비효율성이 큰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보조금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행 중앙정부에서 하달하는 방식의 추진은 지양하고 지자체가 이를 총괄하여 계획·실행토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각종 감사와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거의 반년을 소비하고 있어 행정력의 낭비가 크다. 이는 주민소환제나 투표제의 활성화를 통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 공무원들이 지역농정에 힘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산하 기초자치단체들 사이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역농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제도의 강화와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농정 실패 사례를 살펴볼 때,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권리중심적 철학이 아닌, 의무중심적 철학으로 우리 모두가 이행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각 주체들의 권리는 그들의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찾아나갈 것이다.

〈청중토론 2〉

이 창 규 평창군연합회

읍면축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지금 농

민들은 빛을 갚을 시간도 없다. 공산품 판매 이익금을 환수하여 농업 부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농지문제에 대해서는, 600평 이상에 대해 외지인이 살 수 없고 임대도 안된다. 농지임대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청중토론 3〉

: 김영대 괴산군연합회

지역에 돌아가서 지방농정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겠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청중토론 4〉

: 박완서 영주시의원

농협은 부정선거로 얼룩져 있지만, 그나마 기초의회는 제대로 된 선거제도가 확립되어 낫다고 본다. 도농복합형이든 농촌지역이든 2/3 이상이 농관련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지방농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약하다. 지방토호(기득권자)들의 영향력이 커서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 어느 조직에서도 제대로 통하지 못한다.

중선거구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도농복합형 지역에서는 2~3개 동을 묶어 한 선거구로 하고 먼 지역에서는 1~3명을 뽑는 게 좋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방의원의 정치 아카데미화에 대

해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것이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이다.

1993년 쌀투쟁 당시 영주시의회에서는 쌀개방 반대를 위해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좌절되었다. 이번 한-중 마늘 사기협상에 대해서도 재빨리 대응해야 할텐데, 한농연 지방의원협의회에서는 정보를 빨리줘야 할 것이다.

(이규천 연구위원)

김덕영 농업정책과장의 주장은 잘 들었다. 솔직히 농경연에서는 나와 같은 방식의 연구를 원하지 않는다. 순전히 내 개인이 추진했던 연구였다. 직접 시군의회·공무원·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분석했다.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도록, 안 되는 곳도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 아닌가?

서봉석 의원이 언급했던 의원들의 연구회 조직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농림위원회를 의회 내에 둘 수 있도록 광역화하자고 한 것이다. 님비 현상으로 인해 지역간 쪼개기 예산 배정밖에 되지 못하는 게 현실 아닌가? 우선 필요한 사업부터 집중하기 위해 지자체를 광역화하고자 주장했던 것이다. 김기태 지사장의 '위기의식 공유'가 지방농정 발전의 원동력이란 주장에 공감한다. '위기'와 주체간의 '갈등'이 없다면 어떻게 새로운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집행기관의 통합 문제는 곧 '조직화'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방농정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협조가 부족한 실정이다.

WTO에서는 중앙과 지방재정에 대해 합쳐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문제이다. WTO·OECD가 지자체까지 가서 감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도 시장손실

에 대해 농민들에게 소득지원 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긴급구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엄연한 가격지지정책이다.

(김원기 의원)

이번 한-중 마늘 사기협상과 같은 경우, 의원들 간의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 제2기 한농연 지방의원협의회는 바로 이러한 동시 결의문 채택 운동 추진을 1차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보 공유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지방의원들이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스스로 기르고 지켜나가야 한다.

(서봉석 의원)

선거에 있어서 계급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똑같은 농업관련 출신 의원이라 할지라도 자본가와 영세농민 등으로 나뉠 수 있다. 그들의 출신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 똑같은 농업계 의원이라 할지라도 어떤 의원은 자본가나 재벌의 편에 서기도 하고, 어떤 의원은 농민의 편에 서기 때문이다.

(김덕영 농업정책 과장)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도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여 비효율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문화마을' 사업의 경우, 행자부는 '아름마을', 농림부는 '문화마을', 농촌진흥청은 '테마마을', 농협은 '팜스테이' 등으로 중구난방이다. 이걸 통합하자는 얘기다. 생색내기식 사업은 안된다.

쌀산업종합대책의 문제점과 쌀 위기 극복방안

〈주제발표〉

쌀산업종합대책의 한계와 문제점

: 윤 석 원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
WTO 국민연대 공동 집행위원장

8월 13일자 중앙일보 쌀관련 보도를 보니, 왜 쌀값을 안 떨어뜨리느냐고 한다. 일본처럼 우리도

수매가격을 하락시키고 쌀을 시장에 맡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70년대 초부터 쌀재고 과잉을 겪은 뒤, 우리보다 훨씬 탄탄한 소득보전정책을 쓰고 있다. 이마저 미흡한 우리가 수매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WTO 체제는 시장기능을 중시하면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수출국들은 막대한 규모의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나라들에게는 시장기능을

강조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무조건적인 시장기능만 강조하는 분위기 같다.

만약 쌀 관세화를 유예시켜 MMA 물량을 8% 정도까지 증량시킨다고 해도 매년 약 300만석의 쌀을 의무도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지금의 쌀재고 과잉 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의 정부 쌀산업종합대책은 단순한 경제논리와 시장기능만을 염두에 둔 채, 농민의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는 가벼운 정책이다. 거창한 정책 목표를 내세웠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은 없으며, 소득보전정책으로 전환하는 선진국 농정추이를 외면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한국 농업의 방향은 좌우된다. 우선 금년 수확기의 쌀산업 대책이 필요하다. 쌀재고를 수확기 이전에 긴급 처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북지원 등을 통한 획기적인 쌀재고 처분이 없이는 금년에는 쌀값 폭락을 면하기 어렵다. 생산자가 수확기 시장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농가당 평균 2석씩 수확기에 보관하면서 보관료를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쌀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한다.

중장기적인 쌀산업 대책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선 올바른 농정 패러다임과 철학을 정립하고 농정의 목표를 바로잡아야 한다. 쌀산업의 중장기 자급율 목표를 설정하고 농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소비감소에 대응한 시장기능 중심

의 생산조정은 매우 위험하다. 식량자급율 목표를 세워 생산자들이 계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산조정을 통해서 가격을 유지해 나가고 2005년 이후의 쌀산업 대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조차 나서지 않고 농업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려 하지 않는데, 이제부터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지정토론 1〉

중장기 쌀산업대책에 대한 코멘트

: 박 동 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현장 농민들은 매우 큰 혼란상태에 있다.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일, 농가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끌고 나가야 한다.



▲ 쌀 문제는 어느 것보다도 회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식량자급율과 쌀자급율을 설정하고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폐쇄경제체제일 때에는 계획을 통해 실현 가능하겠지만 외국 농산물이 얼마든지 도입될 수 있는 개방경제 하에서는 품질·가격경쟁력에 의해 자급율과 수급 상황이 결정될 것이다. 일본이 이미 신농업법 조항 등을 통해 자급율 향상을 시도해 왔지만, 일본내 학자들마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 인위적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자급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정토론 2〉

쌀산업종합대책의 문제점과 쌀 위기 극복방안

윤상연 한농연 경기도연합회 수도작분과위원장

지금 450만석 규모의 쌀재고 처리 문제는 매우 시급하다. 대북지원이나 주정용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004년까지는 논농업직불제 지원 면적 상한을 5ha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농민들도 점진적인 쌀값 하락에 대해 감수해야 한다.

〈지정토론 3〉

이 대 형 한농연 고흥군연합회장

민족의 삶과 함께 쌀은 이어져 왔으나, 강자에

의한 세계화로 위협받고 있다. 쌀산업종합대책은 쌀포기 탁상정책이고 소득정책 없는 농민말살 정책일 뿐이다. 전작보조금이 300평당 36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쌀 부족시기 때 혼분식 장려로 인해 중장년층까지 빵·육식식사에 길들여져 식생활이 전반적으로 붕괴되어 있다. 이를 해결해야 한다. 2004년 쌀 재협상에 대한 주체적 대응이 미흡하다.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① 쌀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과 마찬가지로 농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② 즉, 쌀값은 낮아질 수 있지만, 농가소득을 보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농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양질미 중심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③ 지역환경보전 농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④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정토론 4〉

쌀산업종합대책에 대한 제언

이 봉 주 농협 RPC 전국협의회회장 / 연무농협 조합장

RPC를 운영하는 조합장의 입장으로 볼 때, 정부 대책을 통해 쌀문제가 해결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에 대해 나름대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재고쌀 처분 : 대북지원이 제일 바람직하다

고 본다. 비용이 최저로 들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명분이 있으며, 통일농업도 고려해야 한다.

② 수확기 대책 : 금년도에 3,600~3,700만석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100~200만석 정도의 생산량에 대해 시장격리가 필요하다.

③ 현재 농민과 농협 RPC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부는 고려해야 한다. 포대수매시 농민들에게는 산물수매 때보다 2중의 작업이 소요된다. RPC의 경영손실도 증대되고 있다. 올해는 개소당 2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RPC의 자체매입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의 대폭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RPC는 농가편익시설이며 공공적 성격을 가진 시설이다. 이의 적자 운영에 대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④ 공공비축제도 : 수확기 당 500~600만석을 비축치 않을 경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비축량을 1000만석 수준 이하로 유지하면서

200~300만석만 매년 수매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⑤ 소득안정직불제 : 이는 감축대상 AMS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 수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추곡수매에는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⑥ 논농업직불제 :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청중토론〉

: 김 용 빈 철원군연합회 회원

자금목표에 대해 윤석원 교수가 언급했는데, 쌀에 대한 목표치에 그치지 말고 전체 식량자급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박동규 연구위원의 시장·품질논리에 대해서 듣고 솔직히 실망이 크다. 획기적 방법도 없을뿐더러, 마치 정부의 계도문을 듣는 것 같았다. 쌀에 대한 등급 조정과 계절진폭의 5~8% 대로의 확대를 건의해 왔지만 아무 것도 이뤄진 게 없다.

관세화 이행시 400% 대의 관세를 몰도록 하면 된다는 것은 현실 오도다. 정부는 분명히 이마저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 생각된다. 농민들의 불신이 매우 크다.

재고쌀의 대북지원은 이제는 대세이다. 이것은 민족통일의 한 부분이 될 것이며 꼭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MMA 수입쌀을 바로 대북지원토록 하자. 모자라는 양에 대해서만 국산쌀로 지원하면 될 것이다.



▲ 황민영(토론회 좌장) 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외 토론자들의 진지한 표정은 8월의 무더위도 잊은듯하다.

(윤석원 교수)

전체 식량자급율 목표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김용빈 회원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3%의 자급율을 올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뒀야 한다. 쌀의 경우 전적으로 시장기능에만 맡기는 식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이는 생산자를 기만하는 것이며 대농만 살라는 식의 매우 무책임한 정책이다.

계절진폭 확대를 유도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도 얘기는 했다. 그런데, 동전의 뒷면을 보면 이것은 정부가 쌀가격을 통제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로 해석 가능한 부분도 있다. 지금 농림부가 생산조정 정책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검토했던 가격조정 정책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봉주 조합장의 말씀과는 달리 생산조정은 매우 장기적인 정책이다.

관세화로 갈 것인가, MMA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나는 판단이 어렵다. 무엇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MMA쌀 대북지원 문제는 국내산 과일쌀 재고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 보인다.

윤상연 위원장님의 수매가 인하에 대한 언급은 매우 파격적이다. 추곡수매가와 수매물량이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 고뇌의 표현으로 생각된다. 이대형 회장님께서 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는 감축대상 AMS를 이용하는 제도이므로 수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생산량만 증가하지, 생산조정도 쌀값 안정도 이루기 어렵다고 본다. 발제문의 내용과 같이 전환한다면 노령영세농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정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박동규 연구위원에게 말하고자 한다. 50년 넘게 지금까지 우리 농업정책은 한 번도 농민을 위한 정책이 없었다. 정부와 농민이 역할을 잘 해야 쌀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공감한다.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박동규 연구위원)

결국 쌀문제는 농가소득 문제로 귀착된다. 이는 규모화로 해결해 나가는 도리밖에 없다.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대비해야 한다.

(윤상연)

고품질로 승부해야 한다. 계약재배·고품질화·실명화를 하여 재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좀더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

(김용빈)

현실을 다시 보자. 우리가 크게 농사짓고, 철원쌀이 인정받고 있다지만 미래에 대한 보장은 전혀 없다. 노령화된 농가에게 얼마나 더 양보하라는 얘기인가? 박동규 연구위원에게 묻고 싶다. RPC 전국협의회와 조합원이 하나되어 정부를 압박하고 우리의 주장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만약 철원의 쌀값이 내린다면, 더 어려운 전북, 전남의 쌀값 하락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도미노 현상이 심해진다. 쌀재고 누적 문제가 심화되는 2년차이다. 제대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민농연**